

# 민주 의총 “통합 추진 어렵다”… 혁신당과 ‘지선 전 합당’ 불발

통합 명분에는 공감대…정청래 대표, 거센 압박에 일보 후퇴  
“지방선거 후 합당 논의” “선거 연대·연합 형태 고려해야” 등 의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내부의 강한 반발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이라는 최후통첩마저 겹치면서 지방선거 이전 양당의 합당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의총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 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 두분 정도는 선거 후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대체로 합당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합당 논의를 전격적으로 제한한 후 최고

위원들을 중심으로 당 내홍이 극에 달했던 점을 두고 양쪽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형식에 관해 이미 사과했지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외부 기자회견을 통해 얘기를 했던 점도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가 합당에 대한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당 안팎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날국회에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대체로 의원들 생각은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합당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질타하고 나섰다.

전날 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은 “논란의 정치적 독실과 당파적 이익만을 좇는 하필왈리(何必利)의 늪에 빠질 때 개혁의 동력은 상실되고 연대의 고리는 끊어진다”고 경고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면서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대표실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인 북구청장 3선 불출마에 경선판 ‘요동’

현직 프리미엄 사라져…민주 후보만 8명 ‘광주 최대 격전지’ 부상

3선 도전과 채급 상황(광주시장·통합시장)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결국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북구청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 단체장이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되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입지자들의 경쟁이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 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문 청장은 10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변하는 정치 지형과 스스로의 부족함을 통감하며 이번 지방선거와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임기 동안 행정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돕는 데 전력하겠다”며 거취 논란에 따른 혼선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북구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접수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만 무려 8명으로, 광주 지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현재 판세는 문상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김동찬 당대표 후보가 맹추격하는 ‘3강 구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민주당 경선 룰에 따른 가산점과 감산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변수는 ‘가점’이다. 신수정 의장은 여성 후보 가점(최대 25%)을, 문상필 부대변인은 경증 장애인 가점(10%)을 각각 적용받는다.

문 부대변인의 경우 탈당 이력이 있어 감산 요인이 있지만, 장애인 가산점이 이를 상쇄하거나 넘 어설 수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여기에 김동찬 후보가 조직력을 앞세워 바닥 민심을 훑고 있어 경선 당락을 가를 ‘표심’의 향배는 안갯속이다.

불출마로 선회한 문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추격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정다운 광주시의

원,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정달성 당대표 후보, 김대원 전 정책위 부의장, 오주섭 전 광주경찰청 사무처장 등 후보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표밭을 갈고 있다. 이들은 현역 불출마로 생긴 틈새를 파고들며 ‘다크호스’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 구도 역시 다자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아전에서는 국민의힘 김순옥 광주시당 대변인과 진보당 김주엽 광주시당 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거대 여당(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군소 후보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선거 막판까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역 구청장의 불출마로 북구청장 선거는 인물론과 정책 대결보다는 당내 경선 룰인 가산점 적용 여부와 조직 동원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한 만큼 컷오프 통과를 위한 합종연횡과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불법행위 수사 ‘부동산감독원’ 설치

민주당, 법안 발의…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인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도 갖는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요구에 앞서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자료는 내부 조사 단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확보한 자료는 1년 안에 폐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김 의원은 개인의 민감 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 우려는 명백한 기우이자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수사로 전향했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이 현행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감독협의회 위원 중 1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해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 국힘 광주시당 경제·청년·복지 공약 발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청년·문화·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개발단 활동 결과와 지방선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광주시당은 5대 정책 기조로 대기업 유치 기반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관광·문화 활성화, 청년 유입,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광주·전남 상륙세 우선 폐지와 법인세 제로 특구 조성을 통해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유치와 에너지 기반 확충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년 정책으로는 근로자 근속시 채용 성공 바우처 도입, 총장로 상권 활성화, 청년 주거 지원, 심야 교통 확대 등이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이 언급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의료 후불제와 출산 지원 확대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광주문화신탁이

#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